

공공기관 일회용 컵 사용금지 및 다회용 컵 활성화 지원 촉구 건의안

(박경희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5388 |
|----------|------|

발의연월일: 2024년 1월 일

발의자: 박경희, 조정식, 구재평, 고병용,
김윤환, 조우현, 정연화, 박기범,
박종각, 이준배, 박주윤, 안광림,
최현백, 서은경, 안극수, 박은미,
이덕수, 김보미, 정용환, 성해련,
김선임 (이상 21명)

□ 제 안 이 유

- 환경부는 지난 2023년 11월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였음.
이로 인해 일회용 컵 사용을 최소화하려 했던 노력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해있음.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컵 사용과
반입을 금지하고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

□ 주 요 내 용

- 가. 환경부는 지난 2023년 11월 ‘일회용품 규제 제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일회용 컵 사용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 나. 2023년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이 연간 약 300억 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약 1억 7천4백만 개로 추산됨.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할 경우 약 4,270톤(co2-Eq)의 탄소배출을 막을 수 있음.
- 다. 이에, 탄소중립과 쓰레기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일회용 컵 사용 및 반입을
즉각 금지하고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

□ 결 의 문 (안) : 별도 붙임.

□ 기 타 사 항

- 이송기관 : 대통령실, 국회 사무처, 행정안전부, 환경부, 전국지바의회
- 붙임 : 공공기관 일회용컵 사용금지 및 다회용 컵 지원 촉구 건의안 1부.

공공기관 일회용 컵 사용금지 및 다회용 컵 활성화 지원 촉구 건의안

환경부는 2022년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약 2주일 앞둔 2023년 11월 7일에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일회용 컵 사용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또한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자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가진 국가에서 시대적 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한다는 것에 대해 과연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정부 부처에서 나온 말이라니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일회용 컵(종이컵, 플라스틱 컵 등)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연간 약 294억 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191억 개 대비 54%가 증가한 수치이며, 2023년 현재에는 300억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회용 컵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일회용 컵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도 낭비되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를 앞당길 것이다.

이제 국민에게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만 하지 말고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행동에 옮겨야 할 때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세종시에 위치한 13개 정부청사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364만 개로 추산하고 있다. 이 공식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계산하면 1억 7천4백만 개의 일회용 컵의 배출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소나무 약 180만 그루가 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동일한 수준인 4,270톤(co2-Eq)의 탄소배출을 막을 수 있는 양이다.

이에, 친환경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성남시의회는 기후위기대응과 쓰레기 저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일회용 컵 사용과 반입을 즉각 금지하고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와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컵 사용과 반입을 전면 금지하라.

하나, 정부 및 각 공공기관은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 및 지원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2024. 1. .

성 남 시 의 회